

배달대행업체, 청소년 범죄 온상 우려 높다

광주 12곳 라이더 중 청소년이 32%... 금은방 절도 등 범죄 유혹도 무면허 운전 등 부대비용 등 맞추려 과속·사고 잦아 대책 마련 필요

배달대행업체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낮고 최저시급 제한이 없는 배달대행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하루 6만 원이 넘는 높은 부대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 등을 감당하려다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광주일보 12월 5일자 6면)들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중 빌린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공모한 10대 세 명 중 한 명인 고교 중퇴자 A(16)군은 평소 가족을 빈번하게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A군은 앞서 또 다른 배달기사 B(19)씨에게 오

토바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B씨에게 수리비 15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돈이 없으면 금은방을 털어 오라. 장물 처리를 해주겠다”고 범죄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혹에 넘어간 A군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다른 10대 두 명을 포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배달업체 종사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청소년 노동 인권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참가율은 지난 2017년 14.9%에서 2020년 6.8%로 줄었으나, 음식배달 노동 참가율은 0.6%에서 3.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2 광주 배달라이더 실태조사 보고서’에

서는 올해 기준 광주 12곳의 배달업체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배달기사 총 인원수는 평균은 567명 수준이었으며, 이 중 청소년은 184.7명으로 3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배달대행업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임대료와 보험료, 배달 수수료, 기름값, 밥값 등 하루에 최소 6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다.

건당 배달비는 3000~3500원을 받는 경우가 60.9%로 가장 높았는데, 이 경우 수익을 내려면 하루에 최소 20건 이상을 배달해야 하는 것이다. 급한 마음에 과속·신호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낼 경우 하루 할당량이 30건으로 뛰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다.

건수 압박뿐 아니라 운전 미숙, 경험 부족 등으로 사고도 잦다.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50%로 2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

료비, 차량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청소년도 57.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무면허 청소년에게도 배달기사 일을 맡기는 사례가 많아 업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군은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또 지난 10월 27일 새벽에는 광주역 일대를 질주하던 10대 ‘폭주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모두 배달대행 일을 하던 이들로 7명 중 6명이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실태조사에 응한 한 학생은 “(배달업체 사장이) 면허증 있다고 물어보긴 했는데, 없다고 하니가 괜찮다고 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든 의미가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솔 청소년들이 배달대행업체를 거쳐 보도방, 롤러스케이팅처럼 하나의 집결지로 활용하는 추세다”며 “배달업체를 통해 서로를 알고 범죄 모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사·구매 부적정에 예산 관리 허술 광주디자인진흥원 감사 무더기 적발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근무성적 평가 등 인사 업무, 홍보물품 구매 부적정, 공사 사용 부적정, 예산 관리 등을 허술하게 했다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13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문책 5명, 경고 2명, 주의 9명 등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35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결과 디자인진흥원은 2019년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규정상 0.5점을 감해야 하는데도 감점 없이 근무성적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미달했는데도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2017년 3월부터 3년 동안 65회에 걸쳐 230명이 3억4000여만원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으며 출장 결과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

진실화해위, 5·18 영화 ‘황무지’ 탄압사건 조사

27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6차 회의를 열고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을 포함한 181건을 조사개시 결정했다.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황무지’를 제작해 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자와 문화공보부가 영화 필름을 압수해 영화 상영이 중단된 사건이다.

황무지 영화감독 A씨가 지난 6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황무지는 5·18민주화

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가 상관의 명령으로 한 소녀를 사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황무지와 관련한 보안사의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확인된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12월 27일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신청자는 2만 310명(신청건수는 1만8383건)에 달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이달 9일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즐거운 성탄절 미리 축하해요

광주 북구청 청년간부 위원들과 어린이집원생들이 5일 오전 구청 광장에 설치된 대형 성탄트리 앞에서 성탄절을 미리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매트리스 구매대행 업주들 상표법 위반 벌금형

미국 유명 매트리스 제품을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한 매트리스 업주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유효영)는 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46)씨와 B(40)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유명 매트리스 제품의 상표사용 권한이 없는 이들은 최고급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26개(시가 2억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고객 개인의 명의로 인건세관을 통해 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

도하기 위해 소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들 부부는 광주시 동구에서 매트리스 도소매업을 하면서 미국에 법원까지 설립해 매트리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이들 부부는 미국에 설립한 법인은 구매 업무 대행과 관련해 배송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운영한 홈페이지 상 동구의 영업점을 ‘한국매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침해행위를 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합의가 이뤄져 상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

다문화가정 생후 6개월 아이 학대 의심 신고 수사

다문화가정의 생후 6개월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2일 밤 8시 10분경 전남대병원에서 ‘생후 6개월 A군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

난 A군은 가족과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나주시 이창동의 집에서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A군 검사결과 뇌출혈 등

의 증상을 발견해 2일 뒤 아동학대 정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 현재 퇴원한 상태다.

A군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경찰은 사건을 이관받아 A군의 아동학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small>기초반, 중급반</small>
<p>▶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p> <p>■ 임야 : 7,500평</p> <p>■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p> <p>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중주거지역)</p> <p>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p> <p>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p> <p>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p>		▶ 경매 물건 추천 ◀
		<p>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p> <p>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p> <p>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p> <p>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p> <p>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p> <p>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p> <p>장성읍 안평리 (농지)▶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p>
<h1>010-6670-9800</h1>		<h1>010-2614-9801</h1>